

‘민주적 평화협조체제(Concert)’와 ‘비핵지대(NWFZ) 평화의 호’의 이론적 검토와 제안

: ‘G2’, ‘평화’, 그리고 안보레짐*

백준기(한신대학교)

논문 요약

이 연구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차원의 안보적 갈등과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집중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 수립의 당위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쟁상태’, ‘소극적 평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질서의 틀로서 ‘레짐’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영구평화’, ‘적극적 평화’, ‘안정된 평화’상태를 유지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안보 공동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안보공동체’로의 직접적인 이행보다는 안보레짐이라는 낮은 단계의 제도화를 통해 높은 단계의 ‘안보 공동체’ 또는 ‘다자간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실현될 안보레짐은 ‘협조체제’로서, ‘강대국협조체제’가 아닌 ‘민주적 평화협조체제’이다. ‘6자회담’의 진화된 형태로서의 ‘동북아협조체제’는 ‘비핵지대의 호’와 연계하여 ‘광역 동아시아’의 평화프로세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주제어: G2, 협조체제, 비핵지대, 평화, 안보레짐, 안보공동체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2012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성과임.

I. 서론

현재 세계정치는 탈냉전 이후 지속되던 주도적 경향—신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쇠퇴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이 진행되는 구조적 전환기의 특징들을 표출하고 있다. 2012년 1월, “다보스 포럼(WEF)”에서 ‘현실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거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러한 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G2’담론 형성과 현실화 가능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G2’담론은 2006년 경 미국학계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2009년 1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행사에서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미국과 중국 간의 ‘G2 회의’를 주창하면서 현실화되었다. ‘G2’ 담론은 중장기적으로 세계질서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까지도 조심스럽게 전제하고 있다.

‘G2’담론으로 표현되는 21세기 미국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재편 가능성 논의에서도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와는 다른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 해석에서 보면, 무정부상태의 세계질서에서 강대국들의 지역패권 추구의 본성을 근거로, 같은 지역에 공존하는 미국과 중국은 장기적으로 경쟁과 충돌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고려할 때, 또는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할 정도의 글로벌 영향력을 중국이 장악하기까지 아직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에 협력관계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2’담론에 대해서는 ‘중국위협론’의 연장선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패권추구론’에서부터, 중국으로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다는 “세력 전이(power shift)”의 입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자연스런 힘의 균형유지라는 “연성 균형(soft balancing)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G2'담론과 더불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와 완성에 대한 필요성이 삼국의 정부 간에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삼각동맹 완성의 상징적인 시발점으로서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이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지난 6월 14일에 개최된 제2차 한미2+2 장관회담(외무국방회담)에서 합의되어 강행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6월 29일, 협정체결유보—은 이러한 전략계획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한반도 차원의 정치, 안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중 간,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전략적 갈등과 군사경쟁이 점증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 수립의 당위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면과제는 지역차원에서 미중 간의 전략경쟁 및 갈등과 한반도 차원의 핵문제라는 갈등의 두 축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개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화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기존의 안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수준을 설정하고자한다. 먼저, 평화체제구축의 현실적 전략범위라 할 수 있는 한반도와 역내의 국제질서와 전략환경에 대해 'G2' 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지역 범주인 동북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낮은 단계의 시도로서 "협조체제(Concert)"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중범위 지역 범주인 (광역)동아시아에서 "비핵(무기)지대(NWFZ)"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협조체제'와 '비핵지대'라는 분석수준을 설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중 간의 전략갈등—또는 경쟁—을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제로서 '협조체제'를, 한반도 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서 '비핵지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분석도구로 '평화'에 대한 "이원적 유형분류(binary categori

zation)”와 “안보레짐(security regime)”를 차용하여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외 예도, 항상 논란이 되는 ‘지역범주’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더불어, ‘협조체제’에는 ‘동북아’라는 소지역 범주를, ‘비핵시대’에는 (광역)동아시아라는 중층적 범주를 실험적으로 적용해 볼 예정이다.

II. 동아시아와 ‘G2’ 담론: 지역범주의 재조정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G2’ 담론의 위상과 비중에 대해서는 학자나 전문가들 간에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미-중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입장이 존재한다. 미어샤이머(J. Mearsheimer)¹⁾는 ‘만약 중국이 민주적이고 글로벌 자본주의체제에 망라된다면, 호전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에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다면 미국은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중국이 세계경제체제로 통합하는 것을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격려하는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겠으나, 중국이 세계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어 부유해지고 민주적인 국가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관여정책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비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powerhouse)이 된다면 거의 필연적으로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하여 동북아에서 패권을 추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어샤이머는 ‘중국이 민주적이고 세계경제에 통합되어있는가, 아니면, 권위적이고 전체적인가 하는 것은 중국의 그러한 행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한다. 왜냐하면, ‘비민주적인

1)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2001, pp. 3~27.

국가가 안보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민주적인 국가 또한 안보에 대해 우려하므로, 어떤 국가든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패권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의 어떤 국가도 중국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것을 관망하지 않을 것임으로, 주변국가들은 균형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 또는 봉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라이벌 국가들과 중국 간의 점증하는 안보경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리하면, 미어사이머는 "공세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에 입각하여,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국가들은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상호 공세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러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무정부적 특성, 군사적 공격능력의 상비,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신' 등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특성에 의한 강대국의 안보논리와 패권 추구에서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미어사이머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peaceful rising)'이라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미국의 관여정책은 실패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중 상호의존에 근거한 협력 가능론이다. 스티브 첸(Steve Chan)²⁾의 경우, 미중간의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상호 간의 신뢰성 있는 공약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 국가 간 경제관계, 특히 채무관계와 같이 중요한 경제관계는 안보의 "외부적 보완재(external-complementary goods)" 관계효과가 있는 것인데, 미중이 이를 알면서도 채무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상호적 재보장을 전제로 한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결박되어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양국의 관계는 균형전략(balancing)으로 보기 어렵고, 결속전략(binding)으로 보아야 한다고 첸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세력 전이 이론의 직접적 적용에

2) 연구센터 코리아 컨센서스, 『2012 코리아 컨센서스 정책구상: 지속가능한 균형사회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한국 구상』, 2012, pp. 237~238 참조.

의한 미중 간 충돌불가피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 혹은 전이에 필요한 80%에 도달하려면 아직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대미 협력정책을 펼 것이며, 설사 미국에 대한 불만족이 존재할지라도 이는 패권도전과는 다르며, 제3의 도발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폭력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지이다. 이에 비해, 기존 패권국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며 국제질서의 거시적 구조에서 보면 중국이 오히려 현상 유지 국이고, 미국이 현상 변경 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셋째, 중국의 국가전략 및 국내 상황에 따른 불확정론이다. 샴보(David Shambaugh)³⁾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권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연성균형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계속해야 하고, 군사력은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에 약 20년 뒤져 있으며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설불리 군사적 경쟁으로 뛰어들 수 없는 국내정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계된 중국 내 정체성이 '자민족 중심주의(political nativism)', 현실주의(realism), 대국적 정체성(major powers), 아시아 국가의 정체성(Asia first), 지구적 개도국과의 연대(Global South),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 지구주의(globalism) 등 다양하므로 인해, 이러한 정체성들이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옌쉐통(Yan Xuetong)⁴⁾은 현재 중국 외교전략에 대해 두 파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나는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적극론자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문제에 개입하여 자원을 소모해서는 안 되며 등소평의 논의대로 도광양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고대 정치철학에 기반하

3)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PII 정책포럼』, 2010년 6월, p. 2.

4) 연구센터 코리아 컨센서스, 위의 책, pp. 237~238.

여 중국이 힘과 도덕을 두 기반으로 강대국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국가주권만을 강조하고 불개입을 주장하는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름대로의 도덕관을 가지고 지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지스(Jisi, Wang)⁵⁾는 21세기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세계의 논리에 따라 중국의 외교대전략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전략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면서, 안보전략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안보의 위협이 어느 특정국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의 혼합(cluster)으로 초래되어 특정국에 대한 적대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외교관계의 관리가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텐슨(Thomas J. Christensen)⁶⁾은 중국이 자국의 부상에 대한 자부심과 국내정치적 취약성이 결합되는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보수적이고 퇴보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전부터 중국은 이미 중요한 지역적,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자국의 힘에 걸맞는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오히려 적극적 자세를 잃고 중국은 물론, 주변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사실 많은 점에서 핵심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결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중국이 보다 많은 국제제도 속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다.

‘G2’ 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국가안보전략(Na

5) 최근 왕지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이며 중국은 미국의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할 경우 결국 중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펴면서 중국 지도부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평가절하를 표출하였다. 왕지스의 미-중관계의 딜레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China Center at Brookings, March 2012, pp. 7-19 참고바람.

6) Christensen, Thomas J.,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China: Recent Less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Washington Quarterly*, July 2009, pp. 89-109.

tional Security Strategy, 2010)⁷⁾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상승하는 영향력의 중심국가들(emerging centers of influence)’—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의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보전략”이 지향하는 ‘강한동맹(strong alliances)’, ‘전력극대화(force multiplication) 동맹’ 등의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전략은 ‘G2’ 담론과 갈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G2’ 담론이 ‘갈등의 담론’으로 전환되면 미래적 시점에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에 대한 담론은 그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신질서,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의 담론적 불확실성은 ‘동아시아(East Asia)’역내질서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은 동북아시아, 범아시아 등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역 개념과 지리적 경계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범주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등 상이한 지리적 범주와 외연이 혼재하고 있으며, 다자간 지역 경제협력기구 형성도 이에 따라 중횡착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의의 현실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정된 개념보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질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역내 협력체제를 고려하거나, 또는 대안적이고 보완적인 지역범주를 창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은 동아시아 신흥시장국 경제발전 모델의 제도적 유사성과 역내 분업질서의 등장에 기초한 개념이다. 1993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 이후 새로운 개념으로 범주화하여 현실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냉전시기 팍스 아메리카체제 하에서

7)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검색일 2012-08-19).

일본 주도의 기러기형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탈냉전기
역내 구 사회주의국가의 세계시장 편입의 결과, 중국과 베트남을 포함하는
확장된 동아시아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출현하였으며,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서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시장통합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구조적 특성이자 지역범주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 역내 질서는 ‘근대(분단과 냉전)와 탈근
대의 중층 복합적 안보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역내 질서는
근대적 의미의 국민(민족)국가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완
의 근대 이행’이라는 과제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영토분쟁문제, 역사문제
등 식민지시대의 유산 청산과 분단 극복을 통한 통합된 국민국가의 건설이라
는 과제가 여전히 역내 현안문제로 상존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냉전종식에
도 불구하고 강대국 간 양극적 대결체제가 역내로 이식된 냉전적 안보질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미해결(정전협정상태)을 비롯하여 그 이
후 지속되고 있는 한미 및 미일 동맹 그리고 중국과 타이완의 분단 등 이
지역의 냉전적 질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
질서는 현재 APEC, ASEAN+3, ADMM(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
g) 등 탈 냉전적 다자주의 협의체들이 실제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21세기형
탈근대적 세계정치의 요소가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냉
전’을 통한 ‘평화’와 ‘탈분단’을 통한 ‘통합’을 이루어 근대적 과제를 정리하고,
역내 ‘다자간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탈근대’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역내에는 이러한 중층 복합적 질서에서 근대적 주권국가의
세력균형 논리가 가장 강력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근대적 주권국가 논리
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가운데 경제적, 안보전략적 국가 간 경쟁과 이익갈등
을 조절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다자주의적 체도는

역내에 부재한 상태이다. 탈냉전 이후 지역화와 블록경제화의 세계적 추세에서, 양자 간 협력 혹은 대립구도가 상존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가장 취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다자주의 기구들이 등장하였지만 주로 기능적인 협력과 협의에 치중하는 양상에 머물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담론의 불확정성에 더하여, 기존의 동아시아 개념에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정학적 연관관계로 볼 때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국가나 지역이 공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이 지역범주에서 온전한 멤버쉽을 갖지 못한 대표적인 국가가 몽골이다. 몽골은 ‘동북아’ 지역범주에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나 ‘아세안+3(ASEAN+3)’ 등과 같은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표방하는 협력체 밖에 있다. 몽골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몽골의 국가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현실정치(realpolitik)적이고 전략적인 논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냉전시기 소비에트 공간으로 분류되던 몽골이 탈냉전기에 들어와 미-중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체제로 지정학적 정체성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몽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유사한 조건에 처해있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 분리되어 있으나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몽골,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직접 연계되어 있다. 중앙아시아를 동아시아 지역범주내로 직접 인입시키는 것은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을 포함하여 확대된 ‘광역 동아시아(Greater East Asia)’와 연계—예를 들어, observer 자격으로—시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는 배경에는 역사지리적, 지정학적 견지에서 지역범주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명실상부하게 망라하지는 의미 외에도, 기존의 동아시아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고 공백부분을 채우자는 의미가 자리하고 있다. 기존의 동아시아 평화체제 담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인 보완재로서, ‘동남아 비핵

지대(1995)’, ‘중양아시아 비핵지대(2006)’ 등을 양 끝으로 하여 대만-일본-한반도와 ‘몽골비핵지대(1998)’를 연계하는—이미 존재하는 아시아의 비핵지대를 연결하는—‘광역동아시아(Greater East Asia)’의 ‘비핵무기자유지대(Nuclear Weapon-Free Zone)’, 다시 말하면 ‘광역동아시아’의 ‘비핵지대의 호(Arc of Nuclear Weapon-Free Zones)’를 수립하지는 취지에서 ‘광역 동아시아’ 개념을 제안하고자한다. 이러한 대륙아시아의 ‘비핵지대의 호’ 수립에서 이미 ‘비핵국가의 지위’를 지닌 몽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몽골은,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Treaty of Semipalatinsk(2006)으로 비핵지대를 수립한 중앙아시아와 연계하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민주적 협조체제’와 ‘6자회담’: ‘평화’와 ‘안보레짐’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달성하려는 ‘평화’의 성격과 ‘체제’의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려는 ‘평화체제’의 도구적 적실성과 이론적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글에서 추구하는 ‘평화’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 조건과 궁극적인 목표를 구분하여 논의 하고자한다. ‘평화’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가 연구자에 따라 언술적 구성이 상이하나, 평화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개념에 대한 공통된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분류(dichotomous categorization)’가 아니라 ‘평화’를 ‘이원적 유형(binary categorization)’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평화체제(영구평화상태)’를 모색한 최초의 연구자들 중 한사람인 J. J. 루소(Rousseau)는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 ‘평화’를 정의한 것을 거부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루소는 ‘전쟁상태’라는 개념 설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생피에르 사제의 영구평화안 발췌문 *Extrait du Project de la Paix Perpetuelle de l'Abbe de Saint-pierre*』에서 루소는 ‘유럽열강 간의 상대적인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상태이며, 몇몇 국가들 간의 조약들은 진정한 평화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⁸⁾ 그에게 있어서 ‘전쟁이 부재한 상태’는 전쟁은 아니지만 ‘진정한’ 평화 또한 아니라는 것으로, 그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상태’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전쟁상태론 *De L'Etat de Guerre*』에서 루소는 ‘전쟁상태’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그는 평화라는 용어가 매우 광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평화와 전쟁을 구분하지만 ‘전쟁이 부재한 상태’가 ‘평화’의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과 평화의 중간 또는 매개개념으로 전쟁상태를 설정하였다. ‘전쟁이 부재한 상태’가 왜 ‘평화’의 상태가 아닌가 하면 전쟁이라는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평화를 중단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평화’라는 개념은 ‘휴식, 단결, 화합, 호의, 애정’이라는 모든 관념들이 포함’한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 그는 ‘평화는 우리들 자신의 존재와 다른 존재들을 동시에 사랑하게 하는 감정의 결정을 우리 영혼에게 가져다주며, 모든 존재들을 우주체계 속에 단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我和 他 간의 호애互愛와 상생, 상호 행복에 대한 동의, 타자로부터의 고통과 갈등이 부재한 상태’를 평화라고 부른다. 그는 굳이 전투라는 무력적인 행위를 수반한 전쟁이 부재한 상태라 할지라도 타자에 대한 불신에서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타자 혹은 적을 파괴하려는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현저한 의사(volonte)’를 보유하고 있다면 평화

8) 김용구, 『영구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 루소와 국제정치』, 도서출판 원, 2001, p. 37.

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 적이라고 선언한 두 적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상호 개시하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도 단지 무력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변경(평화상태)되는 것은 아니며, 이들 관계에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변경이 없는 동안에는 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상호 위해의사를 포기하지도 위장하지도 않은 채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변화된 전쟁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전쟁상태는 한편이 주인이고 다른 한편이 노예라는 단순한 사실로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것은 일국적 차원의 사회내 계층관계 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의 주종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루소가 말하는 '평화상태'는 '영구평화(Paix Perpetuelle)'로서, 전쟁상태를 극복하고, 국가 간 주종관계를 해소하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국가 간 동등한 '연합체(유럽연합)'의 형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루소의 '평화'개념은 갈통(Johan Galtung)의 평화에 대한 연구에 맥이 닿아 있다. 현대 평화학의 주창자인 갈통은 평화의 개념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¹⁰⁾가 그것인데,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방지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폭력이나 무력충돌이 부재한 질서유지'의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평화'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요인이 부재한 상호 동등한 관계질서 유지'의 상태를 의미한다.¹¹⁾

9) 김용구, 위의 책, pp. 102~108.

10) Grewal, Baljit Singh, "Johan Galtung: Positive and Negative Peace." School of Social Science,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30 August 2003, pp. 1~7.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CC0QFjAA&url=http%3A%2F%2Fexchange.drawloop.com%2Fpublished%2Fdownload%2F10379&ei=BY8wUIjhCCLYigfEnYGoCw&usg=AFQjCNEONbDBIFQE0hUPzXI5mLptzdsEfa&sig2=HrfAmUD4GEbPoSlqtxfkDQ&cad=rjt>(검색일 2012-08-19). 갈통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의 구체적인 전개와 발전, 그리고 평화학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996, pp. 1~69. 참고 바람.

11) Grewal, Baljit Singh, (2003), Ibid., pp. 4~6; 황지환,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동아시아 연구원, 2011.

갈통의 ‘적극적 평화’는 루소의 ‘영구평화’와 비교할 때, 루소의 ‘호애(互愛)와 상생, 상호 행복에 대한 동의, 갈등이 부재, 상생과 공존, 국가 간 동등성’ 등의 개념을 ‘평화의 적극적인 상태’로 해석하면 ‘적극적 평화’와 ‘영구평화’간에는 공통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갈통의 ‘소극적 평화’ 개념이 루소의 ‘전쟁상태’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 부재하지만 구조적 폭력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진정한 형태의 평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루소의 ‘전쟁상태’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평화’를 지양하고 ‘적극적 평화’를 지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갈통의 입론은 전쟁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상태(영구평화)’를 구축하려는 루소의 평화 구상과 동일한 사상적 계열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K. 보울딩(Kenneth Boulding)의 평화 유형분류¹²⁾는 루소의 ‘평화’와 개념적 친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보울딩은 ‘평화’를 ‘안정된 평화(stable peace)’와 ‘불안정한 평화(unstable peace)’로 구분하고 있다. ‘불안정한 평화’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힘에 의한 억지와 합의에 의한 규제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평화’는 ‘안전에 대한 신뢰의 결핍’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타자 혹은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의사(volonte)’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억지력과 규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전쟁상태’와 유사하다. ‘안정된 평화’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없고 전쟁에 대한 대비조치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서 루소의 ‘영구평화’ 상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평화’의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성은, ‘전쟁상태’, ‘소극적 평화’, ‘불안정한 평화’ 등 어떻게 정의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점이다. 결국은 평화의 두 번째 유형이자 궁극적인

12) Boulding, Kenneth, *Unstable Peace*. Austin: Texas University Press, 1979., 황지환(2011)의 글에서 재인용.

유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위의 연구자들이 첫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으로의 전환이라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을 필연적인 것으로 고정화하지는 않았으나 '평화체제' 실현의 현실성과 현실주의 정치(realpolitik)의 조건으로 볼 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정치현실과 냉전의 규정력이 잔존하는 동아시아의 체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쟁상태', '소극적 평화', '불안정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질서의 틀로서 '레짐(Regime)'이라는 개념을, 그리고 '영구평화', '적극적 평화', '안정된 평화'상태를 유지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S.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에 따르면 '레짐'은 '기존의 국제관계 영역에서 행위자들(국가 등)의 기대가 수렴되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과정'¹³⁾을 의미한다. R. 저비스(Robert Jervis)는 '안보레짐(security regime)'에 대해, '타국가들이 맞대응(보복)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국가들이 자신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원칙이나, 규칙, 규범'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안보레짐 개념은 '단순히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이나 기대 뿐 아니라, 단기적인 사리사욕 추구 이상의 협력형태'를 의미한다.¹⁴⁾ 그는 '국가들의 사리추구가 안보딜레마를 초래하며, 이 안보딜레마가 효과적인 안보레짐의 주요한 장애'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들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타국에 대한 위협적인 결과와 이에 대한 타국의 대응(보복)을 예측하여 안보딜레마를 줄임으로써 분쟁을 회피'할 때 '안보레짐'이 구축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¹⁵⁾

13) Krasner, Stephen D.,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Krasner, Stephen D.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2.

14)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Stephen Krasner(1983), *op. cit.*, p. 173.

15) *Ibid.*, pp. 174~176.

1950년대 초, R. 웨이그넨(Richart Van Wagene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라는 용어는 K. 도이치(Karl Deutch)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념화되었다. 도이치의 ‘안보 공동체’는 ‘서로 통합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는데, 여기서 통합이란 하나의 영토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장기간 동안 평화적 변영의 기대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때 이룩된다. 또한, 그에 따르면, ‘공동체 의식이란 공통의 사회문제가 평화적 변화의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¹⁶⁾ 그가 말하는 ‘안보 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 국가들이 상호 물리적인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진정한 보장이 존재할 정도로 통합된 사람들의 그룹’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는 ‘안보 공동체’를 ‘합병된(amalgamated) 안보 공동체’와 ‘다원적(pluralistic) 안보 공동체’로 대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단위가 공식적인 합병을 통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한 유형’을 말하며, 후자의 경우는 ‘개별 정부의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원적 안보 공동체’의 구성 국가들은 공동의 제도들로부터 도출된 핵심가치들의 적합성과, 상호 정체성과 충성심이라는 상호반응성, 그리고 ‘우리 성(we-ness)’이라는 의식을 보유하며, 평화적 변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대를 향유할 정도로 통합’되어 있다.¹⁷⁾ 이 중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안보 공동체’는 ‘다자간 안보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다원적 안보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자간 안보 공동체’의 역사적 사례로서 양국 간 유형으로는 ‘스웨덴-노르

16) Deutsch, Karl W., Burrell, Sidney A., Kann, Robert A., Lee, Maurice Jr., Lichterman, Martin, Lindgren, Raymond E., Lowenheim, Francis L., Van Wegenen, Richard and W.,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의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1, p. 278 재인용.

17)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 "Security Communities in Theoretical Perspective." edited b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6~7.

웨이 패턴’(K. 도이치)¹⁸⁾, ‘1940s. 미국-멕시코 유형(G. 곤잘레스와 S. 헤거드)’¹⁹⁾, ‘미국-캐나다(1871-1940) 유형(S. 쇼어)’²⁰⁾이 거론되며, 다자간 유형으로는,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²¹⁾는 존재하지만, ‘NATO’, ‘EU’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OSCE가 도이치의 표현대로 ‘평화적 변화’를 창조하는 ‘안보 공동체 구축모델(security community-building model)(E. 애들러)’²²⁾로서 주목받고 있다. 양자간 유형은 한반도/남북한 차원에 적용이 가능하고, 다자간 유형은 동아시아 역내에 적용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의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통합도를 감안할 때, 냉전과 정전상태가 혼용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는 보다 ‘낮은 단계의 제도’를 거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단계의 제도’는 ‘안보레짐’을 통해 현실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안보레짐’의 경험적 사례로는, SALT와 START 등, 일련의 군축관련 조약,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핵무기금지대(NWFZ)’,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 안보레짐으로서 ‘유럽협조체제’와 ‘비핵무기금지대’가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지역 내에 상존하는 냉전과 전략갈등, 그리고 한반

18) Deutsch, Karl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68, pp. 193~201.

19) Gonzalez, Guadalupe and Haggard, Stepha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op. cit.*, pp. 265~288.

20) Shore, Sean M., "No Fences Make Good Neighbors: the Development of the US-Canadian Security Community, 1871-1940",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op. cit.*, pp. 333~360.

21) 웨버(Ole Wæver)의 경우에, NATO가 ‘안보공동체의 기둥으로 발전하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기껏해야 전략적 군사동맹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안보공동체’ 논의와 NATO의 관계에 대해서는 Wæver, Ole, "Insecurity, Security, and Asecurity in the West European Non-War Communit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op. cit.*, pp. 69~106.

22) Adler, Emanuel, "Seeds of Peaceful Change: the OSCE's Security Community Building Model.",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op. cit.*, pp. 119~152.

도 핵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영구평화'나 '적극적인 평화'를 직접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전쟁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극적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공동체'로의 직접적인 이행보다는 안보레짐이라는 낮은 단계의 제도화를 통해 높은 단계의 '안보공동체' 또는 '다자간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안보공동체로의 '직접 이행론'이나 2단계 '연속 이행론'이 아니라 '2단계 순차 이행론'—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저비스는 '유럽협조체제'를 '안보레짐의 최선의 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유럽협조체제하에서 레짐의 구성국가들(열강)은 '그들 개별적인 힘의 지위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고, 상대국들의 일시적인 약화나 취약함에서 항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취했고, 상대 국가들이 불응하고 저항할 경우에 즉시 무력을 사용하여 위협하지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이익을 고려함으로써 상호 요구와 행동을 조정하였다.²³⁾ 비록 저비스가 협소한 관점이라 지적하긴 했지만, R. 엘로드(Richard Elord)가 강조한 바와 같이, 강대국 간의 이러한 협조가 가능했던 것은 '개별적인 사리추구에 대한 상호억제의 결핍이 초래할 더 큰 손해'²⁴⁾에 대해 상호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저비스는 비록 유럽협조체제가 '갈등을 척결하지는 못했으나 갈등을 조절'한 것은 사실이고, 국가들이 '전쟁을 궁극적인 제재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위협받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비록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유럽협조체제의 구성국들이 '긴밀하게 상호 단결을 이루어,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연대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협조체제하에 있는 구성국들이 '자신의 안전과 번영에 주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지라도, 상대 국가들이 안전할수록 자신

23)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Krasner(1983), *op. cit.*, pp. 178~179.

24) Elord, Richard, "The Concert of Europe." *World Politics*, No. 28, January, 1976, p. 168.

또한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²⁵⁾

유럽협조체제²⁶⁾는 주요 강대국들이 '전쟁을 회피하려는 공유된 이해관계에 의해 지지'되어졌다. 그들은 '일련의 막대한 파괴적인 전쟁들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무력갈등의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갈등(전쟁)이 그들의 안전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내적인 불안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또 다른 공유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비록 국가들이 감당할만한 '불안정의 정도와 한계는 상이'하였으나, 당시 어떠한 국가들도 혁명이라는 체제내적 불안정한 상태에 휘말려 들어가길 원치 않았다는 점에서 유럽협조체제가 구성 국가들의 체제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⁷⁾

H. 키신저(Henry Kissinger)는 19세기 유럽의 경쟁적인 다극적 세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국제관계의 핵심적 문제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들고 있다.²⁸⁾ 이른바 한 세기 동안 '유럽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기인한 것이다²⁹⁾. 유럽협조체제가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평화가 유럽협조체제를 가능케 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9세기의 유럽협조체제가 안보레짐으로서의 유용한 사례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비록 유럽협조체제가 강대국 간의 동등하고 자발적인 협력의 측면과 강대국-약소국 간의 강요된 비대칭적인 협력이라는 측면 등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협조체제는 '하나에 대항하는 모두'라는 관념에 입각하여 구성원들 간의 평화의 불가분성과 공격

25)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op. cit.*, pp. 179~180.

26) 유럽협조체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백준기의 글, "한국문제의 역사적 재구성 6자회담: 한반도협조체제의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2003, p. 122~126. 수정 발췌하였음.

27) *Ibid.*, pp. 180~181.

28) Haas, Richard N., "What to Do with American Primacy?." *Foreign Affairs*, Vol. 78, No.5, Sept./Oct., 1999, p. 39.

29) 19세기 유럽협조체제와 세력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바람. Shroeder, Paul, "The Nineteenth-Century System: Balance of Power or Political Equilibriu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1989, pp. 135~153.

행위에 대항하는 의무에 기반하고 있다. 협조체제의 참가자들이 그것을 전복하기보다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도록 하여 그 안에서 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구도’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다.³⁰⁾ 유럽협조체제의 작동원리가 물리적 힘에 의한 강제된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측면보다는 그 체제질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공유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권리의 균형, 즉 ‘권리의 균형(equilibrium of rights)’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유럽협조체제의 사례에서 6자회담의 ‘동북아협조체제(CNA: the Concert of Northeast Asia)’로의 전화 가능성을 찾는다면, 테러리즘 등 비대칭적 위협, 인간안보의 위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위협이 참여국가들 간의 전통적인 안보위협(conventional security risk)보다는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데 일정한 공유된 인식이 존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특정국가의 패권국가로의 부상이나 군비경쟁, 헤게모니 갈등으로부터 초래될 위협이 제도나 가치, 그리고 사회적 형성(social formation)의 차이-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등의 차이-보다 더욱 중대한 의미로 고려되어야 한다.

냉전과 정전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제도를 통한 안정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 결국엔 한국문제(Korean Question)의 해결과 연결되어있으므로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넘어서 한국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역내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어젠다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며, 여기에 6자회담을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 ‘동북아협조체제’로 전환해

30) J. G. 러기는 유럽협조체제에 참가한 국가들이 과거의 통상적인 ‘권력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참여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강제하거나 체제질서의 근본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북중시키기 위해 무력이 개별적이거나 집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명백히 타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해차이나 갈등이 발생 시에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러기의 견해는 다음 논문에서 자세히 나와 있다.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1992.; 김우상, 김재현, 박건영, 백창재 저, 『국제관계론 강의 1』, 한울아카데미, 1997, p. 282.

야하는 이유가 있다. ‘동북아 협조체제’는 ‘6자회담’의 진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역사상 19세기 유럽에서 존재했던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가 ‘강대국협조체제(Concert of Great Powers)’의 성격이 강했다면, 동북아에서 실현될 협조체제는 레짐에 참여할 국가 간의 동등한 의사결정권과, ‘핵심이익’에 관한 구성국들 간의 전원일치방식, 인적/재정적 공동보장의 실질적 협의기구의 수립, 민주적인 국제관계 등에 입각한 평화적 협조체제(Democratic Peace Concert of NEA)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6자회담’의 진화된 형태로서의 ‘동북아협조체제’는 우선, 6자회담 당사국 간에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비핵지대의 호’와 연계하여 ‘광역 동아시아’의 평화프로세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로서의 발전된 형태의 평화프로세스는 앞서 논의한 OSCE와 같은 애들리의 ‘안보 공동체 구축모델(security community-building model)’의 수립과정이 될 것이다

IV. ‘비핵지대의 평화의 호’와 ‘세미나 외교(seminar diplomacy)’

동북아시아 협력체제(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지역안보 레짐(security regime)과 경제협력 레짐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연구주제와 직접연관이 있는 논의는 동북아 지역 안보레짐에 관한 것인데, 군비통제나 집합무력체제—집단 군사동맹 등—논의 등, 협의의 안보기구론을 제외하면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공동체(협력안보체제)의 수립과 관련되어 있다. 동북아 안보공동체론 또는 동북아 평화공동체론으로 분류되는 다자간 안보공동체론은 유럽의 사례, 즉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사한 형태의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에 이론적 근거와 역사적 의미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88년 노태우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제의 이래로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의 초석이고, 동북아 평화가 한반도 평화의 완성이자 보증이라는 전제아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축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체 창설을 논의하는 대화체는, 1993년 이래,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 북한을 제외한 NEACD구성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안보대화(NEASeD)’ 등이 있다. NEACD는 정부관료 뿐 아니라 민간대표들도 참여하는 '1.5 Track'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ACD는 ‘협력외교와 예방외교의 관점에서 참가국들이 안보적 상호 투명성 증대와 위기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NEASeD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Track-1 방식으로 ‘소-유럽안보협력회의(mini-CSCE)’ 형식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구상을 제안’한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아직 실질적인 성과물이 없는 상태이다.³¹⁾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과제라는데 역내 국가들은 대체로—일부국가는 소극적으로, 여타 국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먼저, 동북아 지역은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다자간 안보대화체의 결핍현상이 일반화되어 있고, 국가 간 갈등이 중층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둘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역동성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다자간 안보 협력체의 수립이 경제발전과 지역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이슈에 대응하고, 테러문제 등 비대칭적 안보위협, 환경문제, 인간의 생존권, 평등문제 등을 포함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다뤄야할 필요성에서, 군사안보를 넘어선 ‘포괄적 안보’문제로의 정치적 진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동북아 안보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남

31)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 pp. 81~82.

북 간의 양자적 해결의 한계—예를 들어,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라는 대립동맹의 작동 등—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동맹구조를 '교차횡단(cross-cutting) 및 중화(mutual-pervasive neutralization)'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레짐이 필요하다. 동북아 협력레짐으로 북한을 인입시켜 '북한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역내국가들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안보협력체의 결성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3개의 거대한 핵보유국들(미, 중, 러)과 3개의 초경제 대국(미, 중, 일)이 교차 밀집되어 있고, 대량살상무기(WMD)의 생산 국가들과 소비 국가들이 중첩되어 있어 WMD 등 군축통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³²⁾ 이에 더하여 북핵문제가 동북아의 잠재적 위기의 밀도를 일정 정도 높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안보협력 논의를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광역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해 동남아-대만-일본-한국-몽골-중앙아시아를 잇는 '비핵지대의 호' 프로그램은 보완체제(complementary regime)이자 병행적 대안 레짐(parallel-alternative regime)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역동아시아'의 '비역지대의 평화의 호'는 '동북아 협조체제'의 '지정학적 외연'으로 상정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역 동아시아'의 '비핵지대의 평화의 호' 프로그램에서 몽골의 잠재적 역할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한 연구자가 주장³³⁾하였듯이, 몽골은 동북아 협력체제와 평화프로세스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반도의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를 동북아의 제네바로 만들려는 의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98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몽골의

32) 조성렬(2007), 위의 책, pp. 80~81 참조.

33) 구갑우, "동북아 비핵지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생각한다", http://www.preesian.com/article/article_print.asp?_num=40110429151814(검색일 2012-04-26).

‘국제안보와 비핵 지위(international security and nuclear-weapon-free status)’에 관한 결의안은 몽골에게 ‘비핵지위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비핵지위를 국내법으로 명시하는 한편 핵보유 5개국(미, 러, 영, 프, 중)으로부터 핵공격에 대한 몽골의 안전보장을 명시한 공동성명을 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다.³⁴⁾

2001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이던 코피 아난(Cofi Annan)의 제안으로 결성된 국제연대기구인 ‘무장 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 쉽(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은 2007년 몽골정부와의 협력 속에 진행된 ‘울란바토르 회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프로세스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울란바토르 회의’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메카니즘으로 ‘6자회담’을 지지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의 연구자는 ‘1970년대 유럽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이자 OSCE를 산출한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에 착안하여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lanbaatar Process)>’를 제안³⁵⁾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북-동아시아’의 ‘비핵지대의 호’의 수립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된다.

‘광역동아시아’의 ‘비핵지대 평화의 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들³⁶⁾이 탈냉전과 더불어 학계 및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먼저 ‘존 엔디콧(John Endicott) 안’이다. ‘1995년 3월, 존 엔디콧 연구팀은 1991년 이래의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동북아 비핵지대 안>을 제안하였다. 엔디 콧의 원안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34)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산하 <핵군축센터>의 “2010 핵군축 보고서 1: 핵군축관련 국제협약&비핵지대화”를 참고바람. <http://www.peoplepower21.org/582367>(검색일 2012-05-01).

35) 구갑우, 위의 글, pp. 2~3.

36) 이삼성,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2005, pp. 21~17.

반경 약 2,000km의 원형지대를 비핵지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대 안에는 남북한, 일본, 대만 전체와 중국, 러시아, 몽골 일부가 포함되었다. 이후, 미국의 영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현실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비핵지대는 알래스카에 이르는 타원형으로 변형되었다. 이 제안은 비핵화의 대상을 우선, 비전략미사일(non-strategic missile)용 탄두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한적 비핵지대 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카네코 마사오가 1996년 3월에 제안한 원형지대 안은 '지대내의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가에 개별적 의무조항을 부과하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는 지대내의 핵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전면적인 비핵지대 안>이다. 1997년 10월 존 엔디콧 팀은 기존의 제안을 수정하여 제한적 비핵지대를 수립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남북한, 일본, 가능하면 몽골을 포함한 1단계 제한적 비핵지대를 창출'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앤드류 맥(Andrew Mack)의 제안이다. 앞의 두 제안과 비교할 때 실현가능성에 과도하게 천착한 축소된 형태의 비핵지대 방안이다. 유엔군축연구소의 보고서에 발표된 그의 제안은 '가장 확실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는 남북한,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지대의 적용범위를 비핵국가들로 협소화하였고, 핵무기 보유국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메바시 히로미치의 제안인데 한국의 시민사회 일부에서 선호하는 방안이다. 1996년 5월, 우메바시는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3+3 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동북아의 비핵국가인 남북한, 일본 등의 3자가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주변의 핵무기 보유 3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³⁷⁾ 등을 포함한 비핵지대 존중 의정서에 참가한다는 제안'이다. 그는 <3+3 안>이 '남북한과 일본이 이미 공언한 정책에 입각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7) 소극적 안전보장이란, 핵무기 사용 및 그 위협으로부터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의 안전을 핵무기 보유국(통상적으로 미, 러, 영, 프, 중 5개국)들이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조약에서의 보장사항이다.

남북한이 1992년 1월에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67년 12월, 일본정부가 공표한 <비핵 3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비핵화 선언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감안할 때, 우메바시의 제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3+3 안>은 뚜렷한 진전을 이루기 쉽지 않고, 2개국(한국, 일본) 만으로는 목표로 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몽골이 획득한 비핵무기국가지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이지만, 접경한 ‘중아시아 비핵무기금지대(Central Asia Nuclear-Weapon-Free-Zone, CANNWFZ)’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와 상징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여 기존의 제안들을 수정 발전시켜 대륙아시아의 ‘비핵지대-평화의 호(Peaceful Arc of NWFZ)’를 결성하여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광역 동아시아(Greater East Asia)’의 평화협조체제 수립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안들은 민간트랙 중심, 범위의 제한성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논의성과들을 발전시켜 역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가시화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몫이다. 예를 들어, 로드맵을 작성하는 초기단계에서 NEACD와 같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 트랙을 상정하거나,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성과를 거둔 방식인 ‘세미나 외교’를 제도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 애들러는 ‘세미나 외교’가 OSCE의 정착과정에서 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미나 외교’는 단지 어젠더를 논의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의미로, 모든 형태의 다자간 외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대화과 국제협력(정치, 사회, 경제)을 증진하고, 합의적이고 기술적이거나 규범적인 지식을 수단으로 갈등을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외교관,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연구자 등의 회합’, ‘외교업무에서의 전문가들의 활용’ 등을 의미하는 ‘실행적 제도’를 말한다.³⁸⁾

‘세미나 외교’를 토대로 하여 대략적인 로드맵의 예를 제시하면, 먼저, 몽골이 촉진자가 되어 한/일 비핵안과 중앙아시아 지대를 연결하는 포럼형식의 대화를 시작하고, 다음단계에서, 6자회담의 성과에 따라 북한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평화의 호’를 발전시켜 소극적 안전보장(NSA) 등의 안전장치를 획득한 후,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화를 통해 연해주, 동북 3성, 알래스카의 편입문제를 고려하는 수순을 생각할 수 있다. 냉전해체와 더불어 진행된 우크라이나, 남아공 등의 핵무기 폐기 사례는 북핵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략무기감축의 역사를 회고할 때 보유 국가들의 핵감축 또는 전략 수정이 무망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상’, 동유럽 MD의 협상 가능성³⁹⁾, 미-러 간의 New START 등을 고려하면 핵보유국의 핵전략 수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도들의 성공여하에 따라 ‘비핵지대 평화의 호’의 완성을 향한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루소가 주장하였듯이 ‘영구평화’는 ‘혁명’적 변화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냉전질서의 해체라는 세계질서의 대전환이 핵무기해체와 비핵지대의 수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G 2’ 등, 현재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변동(post-cold war/post unipolarity) 또한

38) Adler, Emanuel(1998), *op. cit.*, p. 138.

39) 현재 진행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009년 오바마 정부 초기에 시사했던 ‘동유럽 MD’ 유보 가능성은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11년 11월,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토미 비터가 ‘동유럽 MD 구축문제에서 러시아의 협조는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MD계획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MD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MD추진 재확인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협상 가능성을 양국 모두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조남규, “미-러 관계 급랭, 리셋외교 좌초위기”, 『세계일보』 2011년 11월 24일자.

이러한 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V. 결론

미 국방부는 2012년 1월 5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방안: 21세기 미국방위의 우선순위들(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이라는 국방전략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국방전략지침은 ‘미군의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시아로의 전략전환(Asia shift)’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도 <방위계획대강 2010>을 통해 ‘국방예산을 증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굳혀 가는 중국의 기습 침투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곧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1997))>을 새롭게 개정할 예정’이다.⁴⁰⁾ 금년 4월 30에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전보장선언’을 의미하는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이라는 이름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에서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에 미·일 동맹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⁴¹⁾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아태 지역의 앞에 놓인 다양한 도전들’ 중에 중국요인이 핵심인

40) 김현기, “미일방위협력 15년만의 개정, 어떤내용 담나” 『중앙일보』 2012.10.18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312951&clcc=olink|article|default, (검색일 2012-05-01).

41) 김윤형, “강해진 중국에 공동대응, 미일동맹 성격 재조정” 『한겨레』 2012.05.01일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530806.html> (검색일 2012-05-01).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1년 11월 Foreign Policy에 기고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글에서 힐러리 국무장관 또한 ‘정치의 미래는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며, 미국은 행동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시프트’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 결정적이듯 ‘미국의 관여(engaged America)’ 또한 아시아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힐러리 장관은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을 아시아로 결정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하듯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강한 양자동맹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로서 이 동맹네트워크를 통해 해당지역에서의 21세기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⁴²⁾ 이것은 미-일-호주 간의 우호협력조약으로 결성된 ‘대삼각동맹체제(Grand Strategic Triangle)’를 토대로 한미동맹 등 양자동맹을 운용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2011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에 미군이 상시주둔(2012년부터)하는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구상의 한 사례이다. 당시 오바마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삼각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한 동맹체제의 핵으로 한-미-일 ‘소삼각동맹체제’—과거와 같이 한미, 한일동맹이라는 양자동맹의 합으로서의 삼각체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삼자동맹체제—의 결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시프트와 동맹강화정책이 안보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초래하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감안하면 안보의 군사기술적인 유용성에만 안주할 상황만은 아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의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자 경제

42)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http://www.foreignpolicy.com/articles/2011/10/11/americas_pacific_century(검색일 2012-05-01).

파트너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미-중간의 안보경쟁과 리더쉽 경쟁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역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개념을 차용하면, 동아시아 지역은, 궁극적으로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라는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전쟁 부재 상태))’에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상호신뢰체제, 내재적 갈등의 구조적 해결상태))’로 이행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논의한 ‘북-동아시아(Northern-East Asia)’의 평화협조체제(Democratic Peace Concert). 그리고 ‘비핵지대 평화의 호(Peace Arc of Nuclear -Weapon-Free-Zones)’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교착상태, 북미협상의 부족 등은 ‘세미나 외교’를 토대로 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의 활성화와 남북관계의 보다 바람직한 진전이 ‘동북아 평화협조체제(Democratic Peace Concert of NEA)’, 그리고 ‘비핵지대 평화의 호’의 구축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갑우, “동북아 비핵지대화, 올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생각한다.”
- 길윤형, “강해진 중국에 공동대응, 미일동맹 성격 재조정.” 『한겨레』 2012년 5월 01일.
- 김용구, 『영구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 루소와 국제정치』, 도서출판 원, 2001.
- 김우상, 김재현, 박건영, 백창재 저, 『국제관계론 강의 1』, 한울아카데미, 1997.
- 김현기, “미일방위협력 15년만의 개정, 어떤내용 담나.” 『중앙일보』 2012년 10월 18일.
- 백준기, “한국문제의 역사적 재구성과 6자회담: 한반도협조체제의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4호, 2003.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PJI 정책포럼』, 2010년 6월.
- 연구센터 코리아 컨센서스, 『2012 코리아 컨센서스 정책구상: 지속가능한 균형사회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하나의 한국 구상』, 2012.
- 이삼성,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살림, 2005.
- 조남규, “미-러 관계 급랭, 리셋외교 좌초위기.” 『세계일보』 2011년 11월 24일.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푸른나무, 2007.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편저, 하영선의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1.
- 참여연대 핵군축센터, “2010 핵군축 보고서 1: 핵군축관련 국제협약&비핵지대화.”
- 황지환,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동아시아 연구원, 2011.
- Adler, Emanuel, "Seeds of Peaceful Change: the OSCE's Security Community Building Model."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Seeds of Peaceful Change: the OSCE's Security Community Building Model",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 "Security Communities in Theoretical Perspective", edited b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Boulding, Kenneth, *Unstable Peace*. Austin: Texas University Press, 1979.
- Christensen, Thomas J., Shaping the Choices of a Rising China: Recent Lessons for the Obama Administration, *Washington Quarterly*, July, 2009.
- Clinton, Hillary,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ember, 2011.
- Deutsch, Karl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ew

- Jersey: Prentice Hall, 1968.
- Deutsch, Karl W., Burrell, Sidney A., Kann, Robert A., Lee, Maurice Jr., Lichterman, Martin, Lindgren, Raymond E., Lowenheim, Francis L., Van Wegenen, Richard and W.,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Elord, Richard, "The Concert of Europe", *World Politics*, No. 28, January, 1976.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1996.
- Gonzalez, Guadalupe and Haggard, Stepha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a 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 1998.
- Grewal, Baljit Singh, "Johan Galtung: Positive and Negative Peace." School of Social Science, Auck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30 August, 2003.
- Haas, Richard N., "What to Do with American Primacy?", *Foreign Affairs*, Vol. 78, No.5, Sept./Oct., 1999.
- Jervis, Robert, "Security Regimes.", Stephen Krasner, 1983.
- Krasner, Stephen D.,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Krasner, Stephen D.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China Center at Brookings, March, 2012.
- Mearsheimer, John,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 London: W.W. Norton & Company, 2001.
-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1992.
- Shore, Sean M., "No Fences Make Good Neighbors: the Development of the US-Canadian Security Community, 1871-1940",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 Shroeder, Paul, "The Nineteenth-Century System: Balance of Power or Political Equilibriu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1989.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 Wæver, Ole, "Insecurity, Security, and asecurity in the West European Non-War Community", Adler, Emanuel and Barnett, Michael(1998).

ABSTRACT

A Theoretical Review of and Proposal for the Democratic Peace
Concert and the Peace Arc of Nuclear-Weapon-Free-Zones
: 'G2', 'Peace', and Security Regime

Baek, Jun-Kee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 practical altern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ecurity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r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the strategic rivalry in East Asia has been visualize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Northeast Asia.

This paper defines the 'regime' as a frame for the regional order which manages state of war, negative peace and unstable peace, and the 'security regime' as an institutional frame for the achie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status of Paix Perpetuelle, positive peace and stable peace. Further,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more realistic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high level institutions such as the security community or the multilateral peace community by establishing a low level institution such as the security regime rather than pursue a direct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mmunity.

In this regard,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security regime for Northeast Asia should be a 'Concert regime' which is a democratic-peace Concert, not a Concert of great powers. Therefore, it is conclusive that the Concert of Northeast Asia which is evolved from the Six Party-Talks should be developed as a peace process for the Greater East Asia in conjunction with the Arc of Nuclear-Weapon-Free-Zones.

Keywords: G2, Concert of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s, Peace, Security Regime, Security Community

투고일: 2012년 7월 2일, 심사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0일

